 “산업발전 구심, 기술연구원 활성화 절실”

**+ 동물약품협회 강석진 신임 회장**



“개인적으로는 피하고 싶었죠. 하지만, 뿌리치면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회장직을 수락했어요.”

5억원 보조금 환수. 강석진 회장은 “이미 엮지러진 물”이라며 순리대로, 무리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동물약품은 연간 1억 달러 수출을 바라보고 있어요. 정부 지원이 있다면,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강 회장은 동물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부설 기술연구원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봤다. “앞으로 농식품부 지정 검사기관이 된다면, 동물약품 업계로부터 검사신청이 밀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9월 10일

 광견병 박멸, 국가간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 공감

**+ 인천 송도서 ‘OIE 광견병 국제 컨퍼런스’…100여국서 400여명 참가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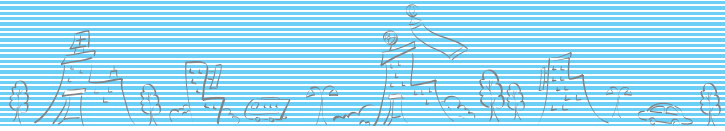
인수공통전염병 불구 정확한 자료 부재  
OIE 주요 회원국 정보 공유 · 대책논의

“광견병 근절, 국제협력에 달려 있다.” 광견병 통제와 근절을 위해 각 나라 광견병 전문가들이 인천 송도에 모였다. 광견병(Rabies, 狂犬病)은 사람의 경우, 공수병(恐水病)이라고 불린다.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만연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25억명 이상이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고, 매년 900만명 이상이 광견병 의심동물과 접촉해



▲ 베르나 빌라 OIE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개막식에서 “광견병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간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상 후 처치' 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광견병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올 들어서도 3건이 확인됐다. 사람에서는 2004년 공수병으로 인해 1명이 사망했고, 그 이후에는 아직 발생보고가 없다.

광견병은 세계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부재하다. 이 때문에 근절을 쉽지 않다. 국가간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는 광견병 통제와 근절을 모색하는 'OIE(세계동물보건기구) 광견병 국제 컨퍼런스' 가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Dr. 베르나 발라(Bernard Vallet) OIE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관계관, OIE 각 회원국 정부대표인 수석수의관(CVO) 및 방역담당자, 그리고 광견병 관련 학계·전문가 등 100여국에서 400여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광견병 사례보고, 진단과 통제 실험기법, 사회경제적 영향, 국가적 근절프로그램 등 36개 학술행사·회의가 마련됐다. 특히 OIE 주요 회원국의 광견병 발생현황과 방역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광견병 박멸대책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근절에 한발 더 바짝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9월 9일



## “비용부담 커서 시험 힘들어…사실상 규제”

### ✦ 업계 “까다로운 현행 기준, 신약허가 비용가…엄두나 내겠나” 수년 이상 팔렸다면 이미 검증…제도정비 차원 문턱 낮춰야

허가를 포기하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시험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계륜과 마찬가지로.”

동물약품 업체들이 현행 재평가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동물약품 인허가 당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1년 팔아봐야 매출 5천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제품이 수도룩하다. 재평가 기준을 맞추려면, 시험비용만 수천만원 든다. 이리저리 저울질해 본 결과, 품목 자진취하기로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동물약품 재평가는 서류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전 허가받은 때가 수십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보니, 인허가 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채우기가 여간 버거운 게 아니다.

특히 복합제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시험자료가 극히 드물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약리, 임상, 잔류 등 각종 시험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게다가 과거에는 없던 생동성 시험 등이 추가돼 현행 신약 허가기준과 거의 같은 수위로 강화됐다. 업체에서는 재평가제도를 사실상 비용만 빨아먹는 또 하나의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품목의 경우 시험실시보다는 무더기 자진 품목허가 취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년 이상 팔렸다는 그 자체로 효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문제제제 위주로 평가를 하거나, 기초자료만으로 시험자료를 대체해주는 등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어 제도정비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8월 31일



## PRRS, 백신이 효율적 컨트롤 수단

‘신속 진단’, ‘효율적 백신사용’, ‘인공감염’, ‘지역관리’ 등. 양돈장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인 PRRS 질병을 두고, 다양한 컨트롤 방안이 쏟아졌다.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지난달 26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체인지 더 게임’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2011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College’ 〈사진〉를 열었다.

이날 김원일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PRRS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등 다른 바이러스보다 10~100배 가량 빨리 변이가 일어난다. 방어면역이 쉽지 않다”며 신속정확한 진단, 적극적인 피드백 수집과 자료분석 등 진단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백신이 효율적인 PRRS 방어수단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 농장유행바이러스 외 부유출을 봉쇄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널리 쓰이는 생독백신의 경우, 방어효과가 높고, 비교적 안전하다. 그렇지만, 농장유행 바이러스 유전형을 확인하고, 돈군 재구성, 교차방어능 예상, 반복적인 일괄접종,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 등 백신관리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선 발라드동물병원 원장은 인공감염을 통한 PRRS 안정화가 PRRS를 컨트롤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유 전 생독백신을 한 후, 모돈을 이동했다. 아울러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등 후보돈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토록 했다. 그리고 산차별 분리사육을 시도했다. 결과, 실험농장 2곳 모두 PRRS 임상증상이 사



라졌고, 생후 40일령까지 PRRS 항원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강재은 제주양돈농협 수의사는 “개별농장 PRRS 관리는 2년 후 재감염 양상을 띠는 등 컨트롤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공통 흐름을 가진 돈군을 한데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관리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제주의 경우, 이미 PRRS 지역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19농가가 참여한다. 컨설팅 창구 단일화, 후보돈 도입차단, 농가전산 사용, 그리고 항체 양성농가에서의 매스 백신접종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8월 31일



## 한·EU 이어 한·미 FTA 발효시 국내 닭고기산업 연간 1,330억 피해

### + FTA가 닭고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 국내 닭고기 산업 현황

우리나라의 닭고기 생산액은 2010년 기준 2조1460억 원으로 농림업 총생산액 43조5233억 원의 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육 농가수는 2011년 2/4분기 기준 2266호, 사육마리수는 1억1012만수로 호당 평균 사육수수는 4만9000수이다.

닭고기는 대부분 계열화 업체에 의해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계약에 의한 생산, 부화, 사료, 도계, 가공, 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다.

닭고기 수입 물량은 증가하는 추세다. 1993년 12월, UR(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정 타결에 따른 우리나라의 농협 협상 이행 계획서에는 닭고기의 경우 1997년 7월부터 무역을 자유화하고 관세율은 1995년 35%에서 2004년 20%로 낮추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 계획서는 수차례의 양자 간 협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산 닭고기는 수입산 닭고기와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사이 15%의 관세가 낮아지는 동안 닭고기 수입물량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6년 1만톤에 불과했던 닭고기 수입량은 2003년 9만8000톤으로 증가했다. 전세계적인 고병원성 AI 발생 여파로 2004년 이후 몇 년간 닭고기 수입물량이 감소했지만 2008년 6만 2000톤에서 2010년에는 닭고기 수입물량이 다시 9만 9000톤으로 대폭 늘어났고 올해에도 8월까지 8만4000톤이 수입되는 등 연말까지 10만톤이 넘는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1. 한·EU FTA로 인한 축산업 피해 추정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5년차	10년차	15년차
돼지고기	556	1214	1214
닭고기	161	277	331
낙농	97	419	805
소고기	121	394	526
기타(축산물 이외)	100	152	184
계	1035	2456	3060

표2. 한·미 FTA로 인한 축산업 피해 추정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5년차	10년차	15년차
소고기	1,040	2,463	4,438
돼지고기	1,640	2,065	2,065
닭고기	589	1,087	1,087
유제품	297	430	430
기타	91	143	173
소계	3,656	6,187	8,193
총계	6,785	9,912	12,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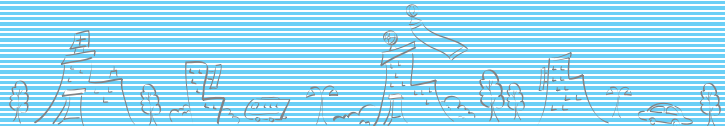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브라질이며 수출국에서 비선호 부위인 다리와 날개 위주 수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 물량(삼계탕 포함)은 2008년 8519톤에서 2009년 1만507톤, 2010년 1만3844톤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증가폭이 미미하고 수입물량 대비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닭고기 생산성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사육기간이 33일 전후로 짧아 1.5kg 정도의 소형 닭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산은 2010년 기준 72만5000톤(도축물량), 수입산이 9만9000톤으로 자급률은 87% 수준이다.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은 2009년 기준 12.7kg으로 일본 15.2kg, 미국 44.6kg 등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비는 kg당 1.05달러로 프랑스 1.11달러보다 낮고 브라질 0.57, 중국 0.94 등 프랑스를 제외한 주요 육계생산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육용전용 닭 종자의 전량 수입 의존에 의한 종자의 해외교섭력 상실로 인한 종자 로열티 지급 등이 생산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출하체중이 가벼운 소형육계 위주의 생산으로 종축구입비 과다 소요, 외국의 비선호 부위 저가 부분육 수입량의 증가 우려, 동물 복지형 축산시스템 도입 준비 미흡 등은 국내 닭고기 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 FTA 추진 현황 및 계육산업에 미치는 영향

1995년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는 기존GATT에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 무역 분쟁조정권,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 강력한 법적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분쟁 해결을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치해 협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게 됐다. 이후 2011년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가 출범했지만 다자간 무역협상은 다수의 이해 당사자 국가 간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직접 이해 당사자국가의 협상으로만 진행되는 FTA(자유무역협정)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FTA는 특정 국가 간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관세를 합리적으로 기간 내(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 인도, 페루 등 44개국과 FTA 협정을 체결, 발효했다. 이외에도 협상을 진행하거나 공동연구 등 협상을 준비 중인 나라는 총 29개국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는 대부분의 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로 인한 우리 농업의 생산액 감소는 약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등의 축산업의 피해가 94%를 차지한다.

특히 한·EU FTA 체결로 닭고기 산업의 피해는 연간 33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FTA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 발효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의 FTA는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발효되지 않은 상태지만 국내 계육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닭고기의 경우 부위 및 냉동, 냉장 여부에 따라 10년, 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구체적으로는 냉동 닭다리, 냉장 닭다리, 냉동 통닭, 냉장 닭가슴살, 냉장 닭날개는 10년에 걸쳐, 냉장 통닭, 냉동 닭가슴살, 냉동 닭날개는 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최근 3년간 국내로 수입되는 닭고기 중 50% 이상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60%에 가깝게 증가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닭고기 관세가 철폐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닭고기 생산액이 연간 10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EU 27개국과의 FTA에 비해서도 3배에 가까운 것으로 국내 닭고기 산업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브라질은 아직 우리나라와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FTA 대응 닭고기 산업 향후 전략

세계 닭고기 생산량의 22%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은 사료비와 연료비 상승,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의 수요 감소 등으로 2008년 이후 생산량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 수요 증가, 브라질은 홍콩·일본 등으로의 수출물량 증가로 생산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같이 중국과 브라질 등의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며 2009년 7,171만5,000톤을 넘어섰다. 이는 2004대비 20%가 증가한 것.

특히 소비량 증가에 따라 향후 닭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닭고기 산업이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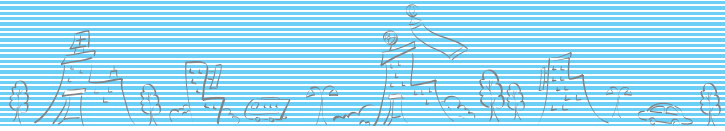
이와 관련 정병학 한국계육협회장은 취약한 닭고기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축사 시설 현대화지만 비닐하우스나 오래된 농가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 농가에 대한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 정 회장은 이들 농장들이 막연하게 문제가 많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 집행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준비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종닭 종자 개발 및 보호·육성도 FTA 대응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연수 한국토종닭협회장은 개방화에 따른 토종닭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토종닭 관련 법안이 마련됨과 동시에 독자적인 자조금 산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종닭 종자 보호와 육성을 위해 종자지원화 보존, 정비 지원 등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산비 절감과 닭고기 수출 확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 강보석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은 출하체중이 증대된 대형육계 부분육 생산 기술의 현장 보급으로 생산비 20%절감, 부분육 50%를 충당할 수 있고 지열 냉난방·LED 활용 기술 개발 보급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분맞춤형 대형 닭고기 생산 기술 현장 보급, 대형육계의 도체 중량 및 부분육 중량규격 설정, 품질등급 설정, 부산물 이용 소량 다품목 지역 명품 양계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관은 또 닭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산란노계·대형닭·토종닭·삼계탕 수출 확대 생산기술 개발, 수출 상대국 기호에 맞는 가열조리식품 가공 상품 개발, 수입국 정보 수집, 가격경쟁력 분석 및 확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닭고기 유통체계 확립에 대해 최중집 마니커농산 대표는 닭고기의 유통에 있어 생산으로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콜드-체인 시스템의 구축과 체인의 유지에 대한 보장 및 생산 이력제를 포함하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로부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특히 미생물의 오염, 잔류항생제, 기타 식품 안전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필요부분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종축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생산 이력제의 소비자 신뢰도는 FTA 이후 국내 닭고기 시장을 지켜주는 대응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11년 9월 23일

 **동물용 백신 판매 사상 최대치 기록**

**+ 구제역 여파...7월까지 판매량 1000억원 돌파**

동물용 백신 판매량이 7월까지 누적집계 1000억원을 넘어서며 동월 판매량 대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동물용 백신의 7월 누적판매량은 지난해 동월 853억원 대비 18.5%가 증가한 10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 493억 원과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동물용 백신이 이 같이 높은 판매고를 기록한 것은 구제역 백신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존 백신 물량 판매량은 다소 감소했지만 구제역 백신 판매량이 더해지면서 동물용 백신 판매량이 급증한 것.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는 “동물용 백신 관납 품목수는 지난해와 변함이 없지만 관납 물량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많은 양의 구제역 백신이 관납으로 포함되면서 기존 관납 백신의 감소물량을 훨씬 웃돌았고 이는 백신 전체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9월 23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 선언**

**+ 5월 16일 이후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없어**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을 선언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H5N1형, 53건)가 성공적으로 박멸됐고 추가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중앙역학조사위원회와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의 마지막 발생지역인 경기 연천의 매물처분 등 방역조치가 완료된 5월 23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됐고 AI 상시예찰(임상·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

마지막 발생일인 지난 5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1629개소(14만9165점), 재래시장 96개소(1만708점),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 51개소(750점) 등에 대한 AI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음을 OIE에 통보하고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그동안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및 방역주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AI 재발방지대책을 근시일내에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후 인근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 철새가 이동하는 봄·가을 등 취약·위험시기에 신속한 AI 위기경보 발령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고취시키고 야생조류 AI 검사건수를 확대기로 했다.

또한 이번 고병원성 AI 확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추정되는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 급여 전 남은 음식물의 열처리 준수여부 합동점검 실시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9월 16일

 **동물약품 백신 국가검정, 현실적으로 개선**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실험이 폐지되고 국가주도의 실험이 실시되는 등 동물약품 백신의 국가검정기준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최근 동물용 백신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국가검정과 국가검정면제제도의 운영에 있어 현장애로와 발전방향에 대해 해당업체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검정기준 일반시험법의 영문화 작업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외국 수출시 상대국이 요구하는 기준서류를 제출키 위해 업체가 개별적으로 서류를 준비했지만 앞으로는 공통적인 일반시험에 대해서는 영문화 시킨 서류를 준비, 보다 작업을 용이토록 하는 한편 이 외에도 영문화 서류가 필요할 경우 검역검사본부 측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신제품 개발시에도 잠정적으로 업체가 정한 기준을 적용해 일단 제품을 개발토록 한 후 국가검정조건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제품개발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 가혹시험도 대폭 조정된다. 뉴캐슬병 백신의 경우 과거 유통상태 등이 열악해 높은 온도에 노출하는 실험 등을 실시했으나 최근의 유통과정은 매우 개선된 만큼 이러한 가혹시험도 폐지토록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 백신 중 우리 기준에 맞춰 실험을 할 때도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을 위해 국가단위의 실험을 실시하는 등 국가검정면제품에 대한 국가검정 서비스 제공을 실시기로 했다.

한편 재평가나 허가 과정에서 동물을 이용한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과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동물실험 대체기법 개발이 필요하단 지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선 연구사업을 통한 단계적인 개선을 진행키로 했다.

이희수 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산업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동물용 백신의 품질향상과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업체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검토하려고 한다”며 “향후 신제품 허가 서류 준비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도 세우는 등 업체의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경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 2011년 9월 26일